

시민 중심, 으뜸 **정읍**

의상을 바꾸는 노력 정읍시 적극행정!





기업 집적화를 위해 분양된 분양용지 관리기관(정읍시) 신속 매입

추진배경

- 정읍시 제2산업단지에 공장 가동중인 A기업이 타 지자체에 증설을 계획중임을 사전 파악
 - 기업 설득을 통해 철도농공단지내 증설하도록 분양 계약 완료
- A업체의 시설 집적화를 위해 철도농공단지 대신 제2산업단지 내 부지 구입 희망
 - 분양받은 철도농공단지 부지 정읍시 재매입 요청

추진내용

- 분양받은 철도농공단지 부지에 대한 재분양 공고 및 제3자 선정 방법으로 추진 시 A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
 - A업체 내부 사정으로 지연될수록 신용등급 하락 및 경제적 손실 발생
- 적극적인 의회 설득으로 철도농공단지 부지 재매입 비용 추경 확보 후 재매입 추진

추진성과

- A기업은 철도농공단지 매도 금액으로 제2산업단지 부지 매입으로 기업 집적화 성공
 - 운송비용 절감, 인건비 절감 등 기업 집적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주축 기업으로 성장
 - 인력창출 150여명, 매출액 2천억원을 목표로 공장 가동 계획

최우수 (미래산업과 오경제 팀장)



사전입찰 안내로 신속 집행 추진 및 재입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

추진배경

-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민간입찰 대행 및 행정주도 입찰 시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
 -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거나 입찰업체가 1,2개소인 경우가 빈번

추진내용

- 입찰사업에 대해 사전에 관내 해당업체 파악 후 입찰 참여 유도
 -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 및 유선 안내

추진성과

- 관내 업체 다수가 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률 제고
 - 보조사업자는 적정금액 낙찰로 사업비 절감, 행정은 유찰에 따른 재공고 등 반복되는 행정절차 감소



우수 (농업정책과 손유경 주무관)



한장으로 체납액 전체 확인하고, 간편납부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우편 송달료 절감

추진배경

- 부과부서가 다양하고, 여러건이 체납인 경우 건별 고지서 발송
 - 체납자가 체납 여부 전체를 확인할 수 없음
 - 건별 고지서 발송으로 우편요금 증가

추진내용

- 체납고지서 발송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안내문 발송(부과부서, 체납액, 가상계좌 표기)
 - 기존 : 체납고지서 건별 발송
 - 변경 : 1~5건 체납안내문 1장, 6~10건 체납안내문 2장

추진성과

- 안내문 한장으로 전체 체납액 확인 및 납부 가능
 - 체납고지서 미 수령 시 체납 사실 미인지 사전 예방
- 체납 건별 고지서 발송에서 체납자별 고지서 발송으로 고지서 제작 비용 및 우편 송달 비용 절감



우수 (세정과 박종덕 팀장)



국내 최초, 사회복지시설 「상시,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」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사업

추진배경

- 정읍시 경로당 706개소 중 120개소(17%)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
 - 노후 경로당에서 에어컨, 전기밥솥, 안마기 등 다수의 전기용품 사용 시 화재 위험성 증가
- 경로당은 과거 친목도모, 작업장 등의 목적에서 공동주거생활시설로 활용 목적이 변화되고 있음
 - 어르신들 다수 이용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곤란

추진내용

- 복합적인 전기화재 위험성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「상시, 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」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
 - 원격점검장치(누전, 과부하 등) 지원



추진성과

- 30년 이상된 경로당 120개소에 전기안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
 - 24시간 전기안전관리 실현
 - 5년간 무상지원으로 120개의 경로당 이용자들의 안전 지원
- 전기안전관리법 원격점검 법령 개정('21. 12월) 이후 국내 최초 적용

장려 (노인장애인과 정하늘 주무관)



한전주,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

추진배경

-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설, 건축 공사 부지에 포함된 지장물(한전주, 통신주 등) 이설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었음
 -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임
- 지장물 소유 공기업들은 부가세 제외 대상임을 알고 있으나 관습적으로 청구하고 있음

추진내용

- 정읍시 고문변호사 자문(3회)
 - 부가가치세는 보상비의 일함으로 함급 가능 확인
-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5년분 전수조사
 -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 : 5년간 부가가치세 회수 가능
- 한전, KT 등에 부가가치세 환수 협의

추진성과

- 공익사업인정고시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함급절차 진행 약속
 - 한전, KT 모두 공익사업 증빙된 대상 우선 함급 추진(예정)
 - 107백만원 인정고시 및 부가가치세 증빙자료 송부
- 627백만원 환급 위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진행중



장려 (감사과 왕경근 주무관)